

“다시 촛불 들어야”…광주·전남 정치권, 내란 청산 한목소리

불법 계엄 1년…지역 정치권, 철저한 진상규명·완전한 청산 촉구 결의
광주연대정신 시·도민의 승리…내란 전담부 설치 타협 없이 단죄해야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은 3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내란 기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완전한 청산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지역 정가는 지난 1년의 시간을 “시민과 광장이 이뤄낸 투쟁의 승리”로 규정하면서도, 미완으로 남아있는 사법 정의 실현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지역 민이 다시 한번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졌다.

강 시장은 계엄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상기하며 광주민의 연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던 모습이나 이재명 당시 대표가 국민을 국회로 호출하던 장면 못지 않게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광주에도 있었다”며 계엄 선포 당일 자정, 48명의 광주 지도자들이 시청에 모여 ‘시민을 지키자’며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던 그 한 장의 사진이야말로 5·18 주역밥 정신과 맞닿아 있는 감동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 시장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지방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개혁”이라며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지방 균형 발전과 부강한 광주를 만드는 일에 광주 공동체가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2·3 사태 극복을 ‘위대한 도민의 승리’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정확히 1년 전 오늘, 전남도민과 국민이 보여준 헌신적인 투쟁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흔들리지 않는 선진 민주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겹찰, 사법, 언론 등 3대 개혁의 완수와 함께 능률의 공익적 가치 헌법 명시,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남도가 이러한 개혁의 길을 트는 데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의회 역시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장을 내놨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전학과 파면을 거쳐 구속됐음에도,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형사소송법 논리를 들어 그를 석방하는 등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의원들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현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판부가 아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며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나 지역 전술 없이 내란 세력을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군 전남도의회 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사태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하다”며 사법부를 질타했다. 김 의장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국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1주년 광주공동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오월 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내란 청산과 개헌을 통한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적 분노를 적시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이뤄낸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은 내란의 완전한 정신뿐이며, 180만 도민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끌까지 감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들의 위대한 저항 정신을 기렸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냈지만, 현 정부 역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는 개혁 조치를 주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알립니다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

광주일보사는 한국신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모금된 성금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쓰입니다. ‘기부로 행복을 더하는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받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2025년 12월 4일(목) ~ 2026년 1월 31일(토)

■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1-864333

NH농협은행 609-01-088271

■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광역시지회 (062-222-3562)

■ ARS번호: 060-700-1212 (한 통화 3000원)

■ 문자기부: #9004 (문자 1통 2000원)

■ 문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est.or.kr / 기부상담 전화 080-890-1212)



2025년 12월 4일

光州日報社·한국신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 시민사회 “정부, 내란 세력 단죄하고 사회 대개혁 나서야”

광주 지역 시민사회가 12·3 불법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사회 개혁에 박차를 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내란·외환증식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 공동체(광주공동체)는 3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광주공동체는 광주시장과 각 자치구 단체장, 지역 의원, 종교계, 5·18 단체, 시민단체 등 250

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1년 전 대한민국의 현정 질서는 불법 쿠데타로 위기에 처했지만, 시민들의 저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표면되고 나리를 지켜냈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민주적 시스템과 기득권 카르텔,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을 우선 추진하겠다던 민주당은 개헌 준비 기구조차 만들지 않았고, 대선 시기 약속했

던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권한 없는 껌데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광주공동체는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내란 세력을 차별하고, 다시는 내란을 꼼꼼히 나올 수 없도록 헌법 질서를 보완하고 새롭게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헌법을 개정해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해소할 것도 촉구했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조경태 “전두환 단죄 못해 계엄”…장동혁은 “의회 탓” 궤변

국힘 지도부 내란 옹호 ‘빈축’ 초·재선 의원은 ‘사죄 메시지’

12·3내란 1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제히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당 대표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의 경우 광주를 방문해 반성 행보를 이어가는 반면,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선 조치”라고 표현했다.

조 의원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12·3광주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가 대한민국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냈다”며 “광주 민주 영령들이 흘린 숨과 한 피가 비상계엄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은 ‘주범’이 사면을 기대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 가윤석열을 만들었다”며 “저지른 죄에 걸맞게 최고

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지만, 광주 시민들이 바로잡아 준다면 건강한 보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호소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도 사과 메시지가 잇달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해 국민께 충격을 드렸다”며 “지난해 12월 7일 의원 일정의 사과 입장을 지금도 변함없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된 단체 사파문도 발표됐다.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정원·박정하·배준영·서범수·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임태영·우재준·유용원·이상휘·이성권·정연숙·조은주·진종오·최형우 등 총 25명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해 국민께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동혁 국힘 대표는 폐스북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다. 장 대표는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정작 ‘사과’라는 표현은 피했다. 원내대표와 초·재선 의원들이 ‘거듭 사과’ 메시지를 반복한 가운데 지도부 정점에서 내란을 정당화하는 듯한 입장이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 - 1539호.

광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빈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른 광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열람)공고합니다.

2025. 12. 4.

광주광역시남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나. 위치: 주월동 361-4번지 일원

다. 결정(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결정(변경)내용	비고
변경	소로1-86	소로1-86	B=10m	일부구간 신형(폭원) 변경
변경	소로2-84	소로1-A	L=145m → 76m, B=69m B=8m, 10m, 총27m	연장 층소 및 폭원확장
변경	소로2-84	소로2-84	L=145m → 69m, G=76m	연장층소(노선분리)
변경	소로2-157	소로2-157	B=8m	일부구간 신형(폭원) 변경
신설	-	소로3-A	L=61m, B=6m	보행자도로 신설

2. 주민의견청취기간: 2025. 12. 04. ~ 2025. 12. 19.(16일간)

3.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과 (☎062-607-4171)

4. 관련도서: 계제생략(열람장소에 비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1. 발전사업 개요:

• 발전설명: 영남나루태양광호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시장면 원방리 903평지(총 31필지)

• 발전소 면적: 154,370.8㎡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설명: 26,000㎾

• 사업시행 예상일: 2028년 11월 이후

• 사업승인일: 2028.11.01 ~ 2048.10.31 (20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주민의견서: 영암나루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열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5.12.02 ~ 2025.12.10(7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621-8012 ~ 팩스: 02-625-7777

• E-Mail: skrtn@soouenergy.co.kr

※ 해당 사업 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 저작자가 직접 찾기도록 하겠습니다.